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이 영 형

경기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1. 2011년 정상 회담 분석 |
| II. 2000~2002년 북·러 정상회담과 남·북·러 3자 협력을 위한 토대 | 2.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 협력 논의가 갖는 의미 |
| 1. 2000~2002년 정상 회담과 북·러 관계 발전 | IV.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 2. 정상회담과 안보 및 경제협력 | 1. 가능성 모색 :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아·태지향성 |
| 3. 정상회담과 남·북·러 3자 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 | 2. 한계 :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체제 불안 |
| III. 2011년의 정상회담과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 협력 사업 | V. 끝맺는 말 |

Key words(중심용어): 러시아 에너지정책(Russia's Energy Politics), 에너지 전략 2030(Energy Strategy 2030), 북·러 관계(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패키지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from Bounding into a Package),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Project for Connection of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국 문 요 약

북한과 러시아는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리고 2011년 8월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로 묶는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2008년 9월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에 강요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 본 논문은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와 PEACE TUNNEL이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2011.11.24)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방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북·러간 협력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러 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시작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997년 1월 카라신(G.Karassine) 외무차관이 베이징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고(Известия, 1997년 1월 23일), 2000년 2월 북한과 러시아는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단절된 양국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00년 7월(19-20일) 푸틴의 북한 방문에 맞추어 러시아 국가두마와 연방의회가 지난 2월 북한과 체결했던 「친선, 선린 및 원조 조약」을 비준했다.¹⁾ 북한이 2000년 4월, 그리고 러시아가 7월에 각각 본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우호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안보조약 체결과 함께 2000~2002년 동안 3차례, 그리고 2011년에 1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 관계가 보다 긴밀해 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들은 평양,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울란우데(Ulan-Ude)市 등으로 오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00년(7월 10일)과 2001년(8월 4일), 2002년(8월 23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그리고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8월 24일 시베리아 동부의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랴티아 공화국(Republic of Buryatia)의 수도인 울란우데(Ulan-Ude)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러간 수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들 중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공간적 변수와 남·북·러 3자간 경제협력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배제된 적은 없었다.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당시의 국내외 정치 환경에 따라 서로간의 국가이익이 다르게 설정되었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국가이익 모색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북·러간 수차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북한에 개방되었고, 남·북·러 관계에 관련된

1) 양국간 체결된 신조약은 쌍방 중 일방이 침략 당할 위기상황에 봉착할 경우에,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에 쌍방은 즉시 접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쌍방은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간 체결된 <친선, 선린 및 원조 조약(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바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0), No. 9, pp. 5-6; *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2001), No. 4, pp. 51-53; 이영형(2002), 『조선/북한/한국과 舊소련/러시아간 주요 외교자료집:1884-2001년 12월 자료』, 서울;엠에드, pp. 406-407.

철도연결 문제가 수시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1년의 정상회담은 기존의 내용에 더해, 남·북·러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북·러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한다.

본 글은 기존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진 북·러간 정상회담과 양국간 정치 및 경제협력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²⁾ 남·북·러 3자간 경제협력 문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북·러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2011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200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4차례의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러 관계 발전 행태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對러시아 및 對북한 정책 수립에 유익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남·북·러 3자간 가스관 연결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 노선을 주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제II장에서 2000~2002년 동안의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면서, 남·북·러 3자간 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 과정을 정리한다. 이러한 토대에 기초되어 제III장에서는 2011년의 북·러 정상회담과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 배경 및 그 의미를 분석하고, 제IV장에서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성 문제를 다룬다. 한계성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에 따르는 북한의 법적이며 제도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능력을 가진 북한 정권의 인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II. 2000~2002년 북·러 정상회담과 남·북·러 3자 협력을 위한 토대

1. 2000~2002년 정상 회담과 북·러 관계 발전

2000년 7월 19~20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북한·러시아 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을 발표했다.³⁾ 평양선언문 제1항은 2000년 2월 9일 체결된 양국간 <친선, 선린 및 원조 조약>에 기초해서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선린·상호신뢰, 그리고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제2항에는 북한 또는 러시아에 침략위협 상황이 발생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원조(援助)·수혜(受惠) 형식이기는 했지만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련된 문제는 제10항에 열거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 국내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분석한 주요 글들은 다음과 같다. 홍완석(2001); 고재남(2001); 고재남(2002); 이동형(2002); 이지수(2004); 우평균(2004); 김갑식(2011); 여인근(2011).

3) <공동선언문(Совместна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декларация)>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No 8(2000), pp. 38-40; 이영형(2002), 앞의 책, pp. 411-413.

쌍무적인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관계를 발전시키며, 이에 유익한 법적 및 제도적 조건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부수적인 경제관련 협정들을 체결하기로 했다. 금속·동력·운수·임업·석유 및 가스 산업·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동으로 건설된 북한의 공장들을 재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기로 했다. 평양 정상회담은 <친선, 선린 및 원조 조약>을 기반으로 향후 양국간 관계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2001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다.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7월 26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했고, 동년 8월 4일 양국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그 결과를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이하: 모스크바 선언)⁴⁾을 통해 발표했다. 모스크바 선언 제3~6항은 양국간 협력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국 정상들은 양국간 친선관계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에 기초해서, 정치·경제·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실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해 합의했다.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북한의 전력관련 기업의 재건 계획을 실현하기로 했고,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연결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는 북한의 주장을 러시아가 받아들인 것이며, 후자는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6항에서 양국은 철도 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TKR-TSR 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 단계에 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TKR-TSR 연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제7항에서 러시아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외부의 불간섭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에서 건설적이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2002년 8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다. 푸틴이 블라디보스톡시를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8월 23일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비공식 실무회담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이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⁵⁾ 외무부 홈페이지에 기록된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푸틴은 남북관계 발전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전력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들의 개·보수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뿐만 아니라, 임업·어업·광업·농업·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⁶⁾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는 TKR-TSR 연결 사업을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4) <공동선언문(Москов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의 원문 및 번역문은 다음을 참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1), № 9, pp. 8-9; 이영형(2002), 앞의 책, pp. 418-420.

5)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а перед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 окончании беседы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КНДР Ким Чен Ир ом>. <http://www.ln.mid.ru/>(2011년 10월 4일 검색).

6) 정상회담 직전에 RIA Novosti는 크렘린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벌목, 석유채굴, 광업, 수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Правда, 2002년 8월 22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푸틴은 TKR과 TSR이 연결되면 운송비 수입과 같은 경제이익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물류가 극동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상기 3차례의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양국관계는 몇몇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푸틴은 자신의 극동지역과 인접된 동북아 안보환경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동부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러시아 관계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북아(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보는 물론이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과 연결되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3차례의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양국관계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추진되었다.

2. 정상회담과 안보 및 경제협력

2000년 7월 푸틴의 방북과 정상회담 개최는 안보협력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이 결합되면서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함이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이 목적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MD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의 안정과 지역 개발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중요했다. 따라서 자신의 극동지역과 국경을 접하는 북한의 돌출 행위를 차단하면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2001년 4월 26-28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소련 해체 이후 무력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다. 이는 사실상 중단되었던 북·러간 군사협력이 재개된 것을 의미한다. 금번의 방문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일리아 클레바노프 부총리와 회동을 마친 뒤, 과거 북한 측에 제공되었던 무기 부품 공급 및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 및 군사 기술 분야 협력 협정’(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과 북한 군 인력양성에 대한 러시아 측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군사협력 조치안’(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에 서명했다.

북·러간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의 일간지 이즈베스치야(Известия)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01년 4월 28일자 신문에서, 러시아가 특정 국가에 무상으로 무기를 원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과의 군사장비 협력을 정치화하려는 크렘린의 방침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크렘린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러시아가 비록 군사부품일지라도 이를 수출하는 대가로 북한에 로켓 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국의 보호 아래 한국과의 대화 활성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신문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

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 없이도 북한의 로켓 위협을 차단시킬 수 있음을 미국 측에 증명할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Известия, 2001년 4월 28일).

2001년 8월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참여한 김정일의 의도는 체제 안정에 대한 러시아의 확고한 지원과 군사협력을 통한 군사력 현대화에 있었다. 특히, 미국의 對북 압박에 따르는 문제를 러시아의 도움으로 극복하려 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의 국제 정세는 북한을 더욱더 압박해 왔다. 2002년 들어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對북 압박 및 9·11 테러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북한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더 러시아에 근접하도록 했다. 모스크바 역시 북한의 체제불안과 이에 따르는 미국 등 주변국의 개입이 자신의 동부 변방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의 러시아는 북한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안보협력 문제와 함께, 북·러간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들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당면한 경제난과 에너지난을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의 안정에 기초된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러시아의 목적이 일치한 결과이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인 2000년 11월 28일~12월 6일 리인규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극동지역을 순회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방정부와 경제교류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는 등 극동지역에서 북한의 경제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이영형 2006, 149).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의도는 경제협력을 통한 전력난 해소와 낡은 산업시설의 재건에 있었으며, 정상회담 이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02년 3월 말 최대북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모스크바 소재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년 4월(4~12일)에는 북한의 조창덕 내각 부총리가 경제대표단을 인솔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조창덕 부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블라디보스톡(연해주)·하바로프스크(하바로프스크州)·블라고베젠스크(아무르州) 등 극동 도시를 방문했다. 금번의 방문에서 북한 경제대표단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002년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이 논의되었고,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벌목)·어업·건설·석유채굴·광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⁷⁾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혁 조치와도 관계되고 있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금 인상 및 물가 현실화, 공장 및 기업소 경영개선 등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여 제한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은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들에 대한 시찰을 통해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성과를 확인하고, 극동지역 경제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이동형 2002, 168).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송출하면서 임업·농업·

7) 2002년 8월에 북한·아무르州간 농업 및 임업분야 협력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벌목 노동자들이 다수 진출하여 왔다.

어업·건설업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 들어 북한의 임업성·경공업성·금속기계공업성·철도성 대표단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했다. 동년 <북-러(연해주)간 경공업 협력의정서>(7월), <과학기술협조 의정서>(9월), <세관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10월)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4-5년에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접촉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접촉에서 북한은 어업·농업·목재가공·조선·석유화학·에너지·운송·노동력 공급·과학기술 협력 등을,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 행정 주체 측에서는 북한의 노동력 공급에 관련된 경제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3. 정상회담과 남·북·러 3자 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양국간 협력 분야에 TKR-TSR 연결 사업의 구체화를 통한 국익 증대 문제가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협력적 정치 분위기를 이용해 남·북·러 3자간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다. 2001년 3월에 악쇼넨코 러시아 철도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TKR과 TSR 연결 사업에 합의해 놓은 상태였다. 2002년 8월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역시 한국이 참여하는 3각 경제협력 [TKR-TSR 연결 사업 등] 활성화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시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철도연결 사업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 한반도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이 실현 단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철도연결 사업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⁸⁾ 사실 러시아는 2001년 모스크바 정상회담 직후부터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실사 작업을 시작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와 동해선 연결 사업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다.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북·러 경제협력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했다. 따라서 푸틴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협력은 곧 러시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협력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Правда, 2002년 8월 23일)이라고 했다.

남·북·러 철도협력 사업을 위해서 북·러간 철도연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러 양국의 철도기관들은 라진~하산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改建)을 위해 수차례 협상과 현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07년 11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양국은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Hassan)역을 연결하고⁹⁾ 라진항을 개건하는 사업에 합의했음을 전했다. 그리고 북한의 라진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 제공 방안과 러시아의 하산과 라진간 철도연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의 인테르 라오 예에에스(INTER RAO UES) 회사 대표단이 2008년 1월 26일 평양에 도착했고(『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26일), 알렉세이 메르시아노프 부총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8) 푸틴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극동발전 대책회의>에서 철도 연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중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TKR-TSR 연결 사업을 성사시켜야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연합뉴스』, 2002년 8월 25일).

9) 라진항과 하산역 사이의 거리는 54km이다.

주식회사 <러시아 철도> 대표단 역시 동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양국의 철도기관은 하산~라진사이의 철도와 라진항 개건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철도기관은 라진항에 부두를 건설하고, 하산~라진사이의 철도를 개건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한 국제화물 중계수송망 건설을 담당하게 될 합영 기업을 창설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합의했다(『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그리고 2008년 중에 라진항에서 유럽까지 시범화물 수송이 진행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8년 10월 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이 조로 친선각 앞에서 진행되었다(『로동신문』, 2008년 10월 5일). 착공식에 참석한 러시아철도공사 야쿠닌(V.I.Yakunin) 총사장은 2013년에 이 철도구간으로 연간 10만 개의 컨테이너가 수송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2000~2002년 개최된 3차례의 정상 회담과 그 이후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양국관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하는 양국의 정치 및 경제협력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 러시아는 북·러 양자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북·러 3자 경제협력을 통해 국익을 증대시키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결정했다. 라진~하산사이의 철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은 양국간 철도 연결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양국관계에서 수시로 거론되어 왔던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궁극적으로 TSR/TKR 연결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의 일환이었다. 철도연결 사업은 이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송전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된다. 송전선 문제 역시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남·북·러 3자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인 철도연결과 송전선 건설 사업으로 요약된다.

Ⅲ. 2011년의 정상회담과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협력 사업

1. 정상회담 분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시베리아로 향했다. 2011년 8월 24일 시베리아 동부의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랴티아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Улан-Удэ)市 외곽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번의 정상회담은 200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이후 9년 만이다.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지만(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8월 25일), 정상회담 직후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나눈 질의 및 응답문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¹⁰⁾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논의 및

10) <메드베제프의 기자 간담회(Встреча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КНДР Ким Чен Иром)> 내용은 다음을 참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24 августа 2011, p. 2; <http://www.mid.ru> (2011년 10월 8일 검색)

합의된 중요한 내용은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 확대, 남·북·러 3자 경제협력 문제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에 관련된 기존의 북한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까지 강행하면서 핵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2011년 7월 재개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구체적인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김갑식 2011, 1). 한·미 양국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핵과 농축우라늄 시설들에 대한 IAEA 전문가들의 사찰 등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해 왔다. 반면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금번 회담에서 북·러 양국 정상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 9·19공동성명을 동시 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여인곤 2011, 2).

정상 회담 이후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물론, 2011년 3월 러시아가 비핵화 조치 6개항¹¹⁾을 제시할 당시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올란우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때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핵물질 생산 및 실험 중단에 관련된 내용이 지적된 것은 한·미·일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중단 및 IAEA 사찰단 복귀와 함께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했었던 사안들이다(김갑식 2011, 2).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의 일부가 포함된 것이다. 핵문제에 따르는 북한의 입장 변화는 한반도 정세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제협력 확대 및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경제협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극동지역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수력 발전소>(Бурейская ГЭС)를 방문하면서 전력 확보 등에 관심을 보였다(『로동신문』, 2011년 8월 22일). 금번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대북 원유지원과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제협력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러시아는 북·중 관계의 긴밀화와 이에 따르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 현상을 극복할 목적에서, 북한은 김정일로서 이어지는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와 중·러간 경쟁 구도를 자극하여 러시아로부터 보다 유용한 경제지원을 획득할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가스관 건설에 합의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8월 24일). 그러나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11) 비핵화 6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시설에 대한 IAEA의 조사, 6자회담에 UEP 안전 포함,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요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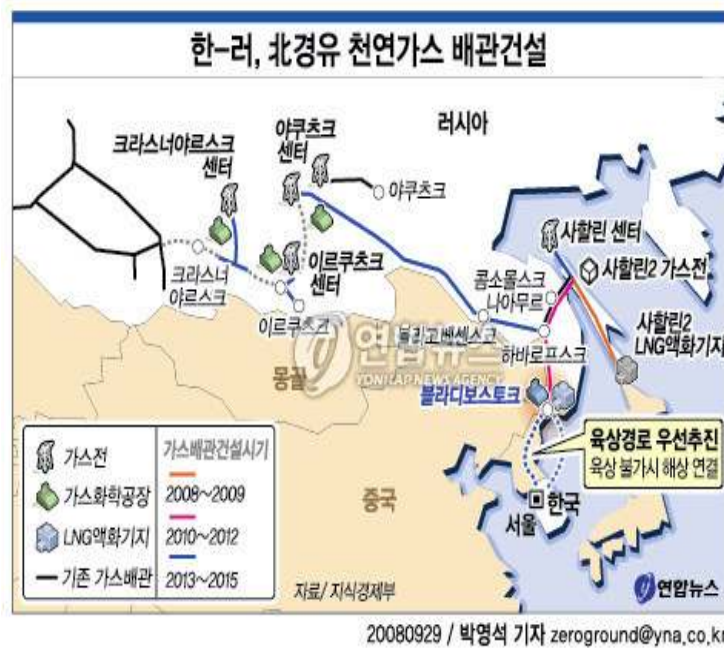
가진 기자 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북한이 3자 협력의 현실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되어 있다. 메드베제프는 북한이 자신의 영토를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수송관 건설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가스관 건설을 위한 3자 특별 위원회의 발족에 합의했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결국,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의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 논리가 맞물리면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9월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市の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러시아, 경제와 외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체제유지 및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불안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정상회담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과 이에 파생된 변수들은 대부분 러시아 극동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재개, APEC 정상회의와 극동지역 개발,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市の 발전>, 북한에 대한 에너지 등 협력 확대, 북한 노동자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확대,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이 그들이다.

2.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협력 논의가 갖는 의미

러시아는 2012년 9월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자신의 극동지역을 아·태 경제권(특히,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시키려 한다. 그러나 북한의 돌출 행위가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돌출 행위가 APEC 정상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1년 앞으로 다가온 APEC 회의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북한은 안정적인 3대 세습을 위한 러시아의 지지와 에너지 등을 지원받으면서 2012년에 시작되는 <강성대국 원년>을 준비하려 한다. 그리고 중국에 편향되었던 정책을 재조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실익을 확보하려 한다(여인곤 2011, 2). 이러한 목적이 양국간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스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3자 협력에 북한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밝혔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북한을 거쳐 사할린産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28~30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29일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PNG) 도입이 성사될 경우, 2015년부터 30년 동안 10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産)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된다는 내용이었다(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09년 6월 24일).



2011년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정은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한국의 가스공사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2012년 1월~4월 사이에 가스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가스관 노선 설계안을 마련하고, 2013년 9월부터 가스관 공사에 착수해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시작하는 일정에 대해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지난 2011년 9월 잠정 합의했다.

가스프롬의 이사회 부의장(зампред правления)인 알렉산드르 메드베제프(Александр Медведев)가 한국의 가스공사와 합의를 거쳐 2011년 9월 2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기존의 100억 입방미터에서 120억 입방미터가 북한 영토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9월 28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유조선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부설된 육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양국간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울란우데 정상회담 직전의 북한 『로동신문』에서 목격된다. 한반도의 8.15 독립과 관련해서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찾아진다. 축전에서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이 북한 측에 제시되었다. 2011년 8월 15일 메드

베제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나는 민족적 명절인 조선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위업에 큰 기여를 한 소련군 군인들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중 략)

우리는 가스화와 에네르기, 철도건설 분야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모든 방향들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로동신문』, 2011년 8월 15일)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견된다. 8월 24일의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을 정리하고 있는 『로동신문』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하면서,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시키는 문제 등 경제 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킬 데 관련된 공동 인식이 이루어 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그룹들을 조직 운영하여 두 나라가 이 방향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로동신문』, 2011년 8월 25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발간되고 있는 『로동신문』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에너지와 철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북·러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실무진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9월 28~30일 데니스프(А.И.Денисов)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¹²⁾ 8월 24일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발전시키는 실무차원의 방북이었다. 러시아 외무부의 보도문에 따르면, 9월 29일 데니스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러시아와 남북한 철도연결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양측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

실무진 회동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 열차운행 행사가 거행되었다. 2001년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양국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르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에 가스관 연결 사업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0월 13일 라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조로 친선각 앞에서 라진-하산 철도구간 시범 열차운행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주재덕 철도성 부상, 왈레리 레셰트니코프 러시아철도주식회사 상급 부총사장 등이 참가했다. 이

12) 데니스프의 북한 방문에 관련된 내용(О визите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И.Денисова в КНДР)은 다음을 참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от 30 сентября 2011, p. 3.

13)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011년 10월 28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회동하여, 울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 등의 실천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로동신문』, 2011년 10월 30일).

들의 연설 내용은 라진-하산 철도구간에서의 화물 수송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사이의 경제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로동신문』, 2011년 10월 14일).

2011년 10월 18일 양국 외교관계 설정 63돐에 즈음하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연회가 개최되었다. 연회에는 알렉세이 보로답킨 러시아 외무성 부상과 정부관련 인사들이 참석했고,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관계자들도 초대되었다(『로동신문』, 2011년 10월 21일). 이러한 시기에 이타르-타스 통신사가 올란우데(Улан-Удэ)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의 의지를 묻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 답장이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가스관 부설에 대한 북한의 지지 입장이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양국간 가스관 부설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협조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¹⁴⁾

IV.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1. 가능성 모색.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아·태지향성

러시아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BP(British Petroleum)에 의하면, 2009년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23.7%에 해당되는 44.38조m³이며, 가채 연수는 84년이다. OPEC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을 44.9조 m³로 평가했다. 러시아 정부에 의하면 잠재 매장량은 그 4배인 164.2조m³에 달한다. 2009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5,275억m³로 미국(5,934억m³)에 처음 선두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지만,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공급되고 있다(이종문 2010, 292-293).

<표1>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기준 : 2009)

확인 매장량(2009년)				생산량(2009년)		
매장량	세계 대비 %	세계 순위	가채연수	생산량	세계 대비 %	세계 순위
44.38bcm	23.7	1	84.1년	527.5bcm	17.6	2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June 2010.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25%를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30년에 이르러서는 약50%까지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Financial Times, November 3, 2008). 이러한 예측은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2003년에 발표된 <에너지 전략 2020>에 따르면, 러시아는

14) 김정일 위원장이 이타르-타스 통신사에 보낸 서문 형식의 답변 전문은 다음을 참조. (『로동신문』, 2011년 10월 23일).

2020년에 최소 6,100억 m³, 최대 7,100억~7,300억 m³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들 천연가스는 서시베리아를 중심으로 기존의 가스 채굴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동시베리아, 극동, 야말반도, 유럽지역의 북부지방(극 대륙붕 포함) 등 새로운 천연가스 부존지역에서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에너지 전략 2020>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전략 2020>은 2005년 당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서 5%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중을 2020년까지 25%(650억 입방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Vedomosti, № 19, February 6, 2006). 따라서 향후 전략적 방향은 러시아 동부지역에 새로운 가스 산지의 개발 및 운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촉진, 응축가스 생산력 발전 및 수출 증대,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력 발전 등을 도모해야 했다(이재영 2009, 321).

러시아 정부는 2009년 11월 13일 <에너지 전략 2030>을 발표했다.¹⁵⁾ <에너지 전략 2020>을 보완한 <에너지 전략 2030> 역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아태지역으로 꾸준히 공급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에너지 전략 2030>은 지금까지 등한시 해 온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및 탐사를 수행할 경우, 2030년까지 천연가스는 최소 16조m³ 이상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전략 2030>에서 정리되고 있는 가스 생산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가스 생산은 듀멘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특히, 듀멘주의 나딤-푸르타조프(Надым-Пуртазовск ит) 가스 산지에서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말(Ямал) 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스 산지에서 생산이 꾸준히 증가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있는 쉬토크만 산지(Штокмановск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에서의 생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타지역에서의 생산 증가에 비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극동지역(특히, 사할린)에서의 생산량 역시 증가된다.

<표2> 2030년까지 단계별 가스 생산 전망(10억m³)

	2005년 (실질 수치)	2008년 (실질 수치)	1단계 (2006-2010)	2단계 (2011-2020)	3단계 (2021-2030)
전체	641	664	685-745	803-837	885-940
듀멘주	585	600	580-592	584-586	608-637
내부 지역					
나딤-푸르타조프	582	592	531-559	462-468	317-323
옵스코-타조프 만	-	-	0-7	20-21	67-68
볼셰헤트스크 계곡	3	8	9-10	24-25	30-32
야말	-	-	12-44	72-76	185-220

15) <에너지 전략 2020>의 연장선상에서 정리된 <에너지 전략 203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러시아 에너지부(<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 참조.

툰스크주	3	4	6-7	5-6	4-5
유럽지역	46	46	54-91	116-119	131-137
내부 지역					
카스피해 연안	-	-	8-20	20-22	21-22
쉬토크만 산지	-	-	0-23	50-51	69-71
동시베리아	4	4	9-13	26-55	45-65
극동	3	9	34-40	65-67	85-87
내부지역					
사할린 섬	2	7	31-36	36-37	50-51

출처 :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pr_4.php. (2011년 2월 18일 검색)

에너지 자원의 생산 변화와 함께 <에너지 전략 2030>에서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 수출 전망 수치 역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천연가스 수출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수출은 2008년에 241bcm에서 꾸준히 증대되어 2030년에 최대 368b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¹⁶⁾ 이러한 수출 전망은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구조에서 자신의 자원 매장량과 국제에너지 시장의 소비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서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3> 2030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 전망

내용	2005년 (실질 수치)	2008년 (실질 수치)	1단계	2단계	3단계
천연가스(10억 m ³)	256	241	270-294	332-341	349-368

출처 :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pr_1.php. (2011년 2월 18일 검색)

아·태 시장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가스수출 전략은 2007년 9월 가스프롬이 발표한 동부가스프로그래(Eastern Gas Program)에 근거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러시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를 생산, 수송, 판매(수출)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통합개발 프로그램이다. 러시아 정부(가스프롬)은 러시아 동부지역을 4개 가스 생산센터(사할린,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로 나누고, 동 센터를 중심으로 가스전 개발, 지역내 가스화, 가스전과 소비지까지 가스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 의하면, 2012년까지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전이, 그리고 2015년까지 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 가스관이 각각 건설된다. 2016년 이후에는 국내 및 동북아시아 가스시장 여건 변화를 검토하여 이르쿠츠크(코빅타 가스전)에서 야쿠츠크

16) 2009년에 처음으로 러시아 LNG가 동북아 지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총 가스 수출에서 LNG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5%에서 2022년에 11%, 그리고 2030년에 1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성규 외 2009, 6).

크까지의 가스관이 건설될 예정이다(이성규 2011a, 9).

러시아는 이르쿠츠크 지역의 코빅타 가스전의 소유권을 TNK-BP에서 Gazprom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이며, 야쿠츠크 지역의 차얀다 가스전 개발, 블라디보스톡 LNG공장 건설, 마가단 해상 광구 탐사 작업 등에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투자 참여를 제안하면서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지역의 에너지 수송망 구축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가스전 개발과 전력 사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은 2011년 9월에 이미 완공되었다. 사할린의 풍부한 가스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가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과 중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톡~북한 청진간 송전망,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¹⁷⁾~북한 나진간 송전망이 건설되고 있다(윤성학 2007, 456-465 참조).

아·태로 향하는 러시아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은 블라디보스톡市 인근이며, 이곳에서 아·태지역내 다양한 국가로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하다. 문제는 북한의 정치행위와 이에 따른 지역 정세의 불안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돌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 삼아 북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1년 6월 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가스프롬 본사를 방문하여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 했고, 7월 초에는 가스프롬의 부사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부총리와 원유공업상 등과 실무회담을 진행해 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연한 대북 제재를 바탕으로 핵 폐기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자립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해 왔다(Georgy Toloraya 2008, 45-69). 이러한 측면에서 극동의 잉여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러시아 아무르州 수력발전소 전력개발과 이를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로 해석되기도 했다.

결국,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아·태 지역으로 공급하려는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환이 된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아·태 경제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환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이 유럽시장 중시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아·태 시장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정책, 에너지 정책의 동부 지향성, 그리고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이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市 인근에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자원과 에너지 정책, 그리고 러시아 중앙정부의 의지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변수가 된다.

2. 한계.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체제 불안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 국제적인 이미지 쇠퇴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예외로 하더라도, 파이프라인 통과료가 연간 1~1.5억 달러 정도로 예

17)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는 연해주의 하산군(Хасанский район)에 있는 마을이다. 하산군은 연해주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 북한, 서쪽으로 중국,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해 있다.

상되며,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를 통한 막대한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한계점은 여러 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3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체제 불안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한계점을 파악하기로 한다. 법적·제도적·경제적·기술적인 문제를 예외로 하고, 북한 정권이 갖는 인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첫째,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의 입장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러시아를 3차례 방문했고, 메드베제프 대통령과는 6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해 왔으며,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북한의 영토를 통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무시하면서 논의될 수 없는 사안이다. 남·북·러 3자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2011년 현재의 상황으로 보서는 남북 관계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에 긍정적인 분위기는 되지 못한다.

가스관 북한통과에 따르는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일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세는 3국간 경제협력에 임하는 모습이 아니다. 물론, 한·러 두 정상이 협력하여 가스관 안전 문제 등의 해결 조건으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자세 역시 북한을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북한에 대한 한·러 두정상의 이러한 자세 한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도록 자극하게 된다. 북한의 반대급부 요구가 있다만,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지역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에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되돌아 올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한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이미 시작되는 듯하다. 2011년 9월 15일 러시아 가스프롬 회장인 알렉세이 밀러(Alexei Miller)와 북한 원유공급상 김희영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동실무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가스프롬의 밀러(A. Miller)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은 국경 통과료¹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한국에 대해 국경 통과료와 배관건설 참여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 에너지 자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GATT 규정에 의하면, 제3국통과에 따른 수송 과정에서 부과되는 통과료[국경통과료, 배관이용료(또는 수송료)] 및 규제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경통과료는 제3국의 국경통과에 따른 불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대가적 성격을 띠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며 국제적인 표준은 없다. 통과료는 배관의 소유와 운영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는 배관의 소유와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료는 국경통과료와 배관이용료가 포함되어 결정된다. 반면, 제3자가 배관의 소유와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면 통과국은 국경통과료만 받게 된다. 통과료의 지불 방식은 당사자들간 계약을 통해 현물 또는 경화 형태로 지불된다. 그리고 배관이용요금(transportation tariff)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가스 수송량과 수송비용(고정비+운영비)이다(이성규 2011b, 44-45).

다. 배관 공사를 위해 북·러간에 철도망 확충과 송전망 연결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부수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3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진척 상황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나 한·러간에도 관련 문제가 논의 중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천연가스관(PNG) 도입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는 양자간 관계일 뿐이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3자 경험의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할 경우 북한이 러시아에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를 한국에 전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한국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현실성이 없는 종이 위의 논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가스관 사업은 남·북·러 3자 모두에 이득이 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자신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을 통해 한국이 이득을 보는 그러한 상황을 북한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체제불안이다. 가스관 연결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2017년부터 러시아 가스가 북한 영토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다.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의 영토를 지나오게 된다. 남·북·러 3자간 추진되고 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의 전체 길이가 약1,200km이며, 이중 60%가 넘는 700km가 북한의 영토를 통과한다(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8.09.2011). 그리고 북한을 통과하는 700km의 가스배관공사 비용이 25억\$로 추산되고 있다(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02.11.2011). 또 다른 보고서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전체 파이프라인 길이를 1,122km로 본다. 그 노선이 블라디보스톡~북러국경~원산~평택/인천으로 되어 있으며, 파이프라인 길이는 러시아 구간이 150km, 북한구간 740km,¹⁹⁾ 남한구간 232km이다. 보고서에 따라 북한 영토를 거치는 길이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700km가 조금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설될 파이프라인은 북한의 동해안을 통해 한국으로 연결된다. 파이프라인이 북한의 동쪽 변방을 거쳐 휴전선으로 이어지지만, 파이프라인 통과 구간이 외부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가 북한의 정치적 부담으로 와 닿는다. 실태조사, 건설기간, 운영기간 등 장기에 걸친 지역 주민의 대외 노출에 대한 부담이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나진에서 휴전선에 이르는 740km 구간의 대외 노출이 불가피하며, 서방을 비롯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동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김정일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게 된다.

상기 북한의 입장과 체제 불안의 문제는 3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의 한계에 관련된 인식상의 문제일 뿐이다. 북한체제 및 제도의 특수성과 절사상의 문제 역시 동일 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남·북·러 가스 협력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문제를 둘러싼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과거의 합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협력의 분위기를 구체화하려면 비상한 노력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금조달 방안, 북한의 법률 및 세제 검토, 가스수송계약 체결 등 검토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이 외국기업과의 PNG사업 추진을 위한 관

19) 북한구간에서는 별도의 지선을 통해 평양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런 법률 및 세제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투자보장 및 건설 보장 장치가 마련된 이후, 북한 내에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V. 끝맺는 말

러시아는 2000~2002년, 그리고 2011년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극동지역 개발에 유익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면서 극동지역 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안보문제와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작업이 이루어졌고,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전력부문 합작기업 및 TKR-TSR 연결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논의되었고,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업·어업·농업·건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2011년의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는 극동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6자회담 복귀 및 남·북·러 3자 경제협력[가스관 건설 사업 등]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TKR-TSR 연결 사업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고,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의 자원 개발에 한·중·일 등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지역의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과 수시로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3자 경제협력으로, 나아가 주변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극동지역 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가스관 연결 사업을 비롯한 남·북·러 3자간 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협력 사업에 관련된 북한의 인식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불확실한 세제와 투자환경, 그리고 통과료에 대한 논쟁, 북한 인력의 기술부족, 정치적 이유로 인한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문제가 협력 사업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북·러간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보여 준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2011년의 울란우데 정상회담 직후인 2011년 9월 28~30일 데니스프(А.И.Денисов) 제1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논의한 내용은 가스관 건설과 유사한 노선의 송전선 건설, 그리고 철도연결 문제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러시아는 남·북·러를 연결하는 철도연결,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을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연결 사업은 이에 필요한 전력이 요구되고, 가스관 건설 역시 전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 스스로가 전력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러시아가 패키지로 묶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3자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의 현실화는 남·북·러 3자간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3자의 정치적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임하는 국가 정상들의 인식이 더 없이 중요하다. 2011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가스관 프로젝트는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적 합의가 북한에 강요되는 듯 한 인상을 심어준다. 북한에 대한 강요는 러시아의 몫이 되었고, 그러한 강요를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게 된다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강요의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요의 반대급부를 한국으로 전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북한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해 보인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남에게 시키지 말고 3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른 누구에게 시킨다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에너지 문제는 특정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3국 공히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관련 당사국의 대통령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통과 PNG의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급안정보장 협정(IGA, Inter-Govern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통과국인 북한정부와 배관 운송자(transporter)간 통과국 협정(HGA, Host Governmental Agreement)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통과 배관 감시위원회(Commission for the Monitoring of Gas Transit)를 구성하여 통과국의 가스 무단인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급 중단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남(2001). “김정일 방러의 평가와 러·북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8월 23일.
- 고재남(2002). “김정일의 극동 방문 평가 및 러·북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9월 24일.
- 김갑식(2011).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의미.” 『이슈와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제 288호.
- 김석환(2011). “남·북·러 가스 협력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 그 이면과 실제.” 『한반도 포커스』. 제16호. 11·12월호.
- 여인곤(2011).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통일연구원 KINU현안분석 온라인시리즈. 08월 25일. (2011년 10월 4일 검색).
- 우평균(2004). “김정일-푸틴 시대의 북·러 관계: 결정요인, 전개과정과 제약요소.” 『북한 조사연구』. 제8권. 제 1·2호(합본).
- 윤성학(2007). “모스크바는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희망.” 『신동아』. 1월호.
- 이동형(2002). “북·러 관계 발전의 성격 고찰: 2000~2002년 김정일·푸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 이성규 외(2009).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구조와 수출수송시스템 분석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성규(2010). “ESPO원유공급과 동북아지역 석유시장 형성 전망.” 한국슬라브학회 2010년 추계 정기학술회의(2010.9.30) 발표 논문.
- 이성규(2011a). “남·북·러 PNG사업이 동북아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 이성규(2011b).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 방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제10호.
- 이영형(2002). 『조선/북한/한국과 舊소련/러시아간 주요 외교자료집: 1884-2001년 12월 자료』. 서울: 엠에드.
- 이영형(2006). “러시아의 對한반도 지정전략과 한국의 대응.” 『북한조사연구』, 제10권. 제2호.
- 이용권(2011).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러시아의 의도와 실현 가능성은.” 『Russia-CIS FOCUS』. 제136호. 11월 7일.
- 이종문(2010).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자원 의존과 네덜란드병 징후 분석.” 『슬라브학보』. 제25권. 제4호.
- 이재영(2009).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고재남·엄구호 편.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이지수(2004). “북한과 극동러시아의 협력관계 연구.” 『국가전략』. 제10권. 제1호.
- 홍완석(2001).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함의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13권. 제2호.
- Georgy Toloraya(2008). “The Six Party Talks: A Rus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Vol. 32. No. 4.
- BP(201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 June.
- Financial Times. November 3, 2008.
- Vedomosti, No. 19. February 6, 2006.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0), No. 9.
- 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2001), No. 4.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0), No. 8.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2001), No. 9.
-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2011년 8월 24일.
-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2011년 9월 30일.
- 『이즈베스치야(Известия)』. 1997년 1월 23일.
- 『이즈베스치야(Известия)』. 2001년 4월 28일.
- 『프라우다(Правда)』. 2001년 8월 22일.
- 『프라우다(Правда)』. 2001년 8월 23일.
- 『러시아 신문(Россий ская газета)』. 2009년 6월 24일.
- 『러시아 신문(Россий 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8월 24일.

-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8월 25일.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9월 28일.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9월 28일.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년 11월 2일.
『연합뉴스』. 2002년 8월 25일.
『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26일.
『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로동신문』. 2008년 3월 21일.
『로동신문』. 2008년 10월 5일
『로동신문』. 2011년 8월 22일.
『로동신문』. 2011년 8월 15일.
『로동신문』. 2011년 8월 25일.
『로동신문』. 2011년 10월 14일.
『로동신문』. 2011년 10월 21일.
『로동신문』. 2011년 10월 23일.
『로동신문』. 2011년 10월 30일.
<http://www.mid.ru/bdomp>. (2011년 10월 8일 검색)
<http://www.ln.mid.ru>.(2011년 10월 4일 검색)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pr_4.php. (2011년 2월 18일 검색)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pr_4.php. (2011년 2월 18일 검색)
http://minenergo.gov.ru/activity/energostrategy/pr_1.php. (2011년 2월 18일 검색)

Abstract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Project for Connection to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 Mainly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

Lee, Yeoung-Hyeong*

Both country of North Korea and Russia has discussed various cooperative business centering the matter of a rail connection through the summit talk of three times from the year of 2000 to 2002. And they, 3 countries have consented a found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f 3 countries for building of a natural gas pipeline to connect to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summit talks in August of the year of 2011. Russia's intention which was shown from the business talks of several times between both country appeared her desire of an economic cooperation from bounding into a package of [Connection of Railway, Building of Gas Pipelines, and Power Transmission].

The project for connection to the gas pipelin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has driven the content of which was consented in the summit talks in September 2008, as a politics aspect to enforce to the North Korea. First of all, therefore it seems that the countries formed such conditions in capable of participation in a cooperative project with an equal qualification the supreme responsible person of 3 countries gather some places in order to realize the project for connection of the gas pipelines has to start an arrangement of the systemic devices in capable of a settlement of a problems for prevention of un-noticed use from a gas pipelines, emergent situation, and safety of PNG service via North Korea, immediately.

■ 논문투고일 : 2011년 11월 27일, 논문심사일 : 2011년 12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6일

* Lecturer, Department of Russian Studies, Kyonggi University.